

광주, 병원노조 잇단 파업…의료대란 오나

기독병원 25년만에 돌입…수속 지연에 예약 진료 취소 등 항의 “내시경 예약하고 여수서 왔는데 검사 못받아” 분통 터뜨리기도 전남대·조선대병원 12일 총파업…시립요양병원 등 14일 예고

광주기독병원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 노조 등도 오는 12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광주·전남지역의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인력 확충,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소속 광주기독병원지부는 지난 4일 사측과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5일 총 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기독병원지부는 이날 오전 7시께 광주시 남구 양림동 광주기독병원 로비층 접수·수납 데스크 앞에 마련한 농성장에서 총파업에 들어갔다. 기독병원지부의 총파업은 지난 1993년 이후 25

년 만이다.

보건의료노조 광주기독병원지부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기독병원 로비에서 전면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부서별 적정 인력 확충, 유급 감정휴가 부여, 임금인상, 신규 간호사 업무 파악 기간을 1주에서 4주로 늘리는 방안 등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기독병원지부는 “전체 조합원 480여명 중에 파업 첫날인 오늘 340여명이 모였지만 최대한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필수 인원을 남겨두고 파업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광주기독병원에는 현재 500여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기독병원은 일반 병동을 제외한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부 예약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진료차질이 발생했다.

특히 파업으로 병원 접수·수납·입·퇴원 수속이 밀리고 예약진료 등이 취소되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항의도 잇따랐다.

여수에서 진료를 위해 파업 하루 전인 지난 4일 광주를 찾은 이일수(77)씨는 “1년 전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예약하고 검사를 받기 위해 시외버스를 타고 왔다”면서 “오전 8시부터 흑시나 하는 마음에 내과 앞에서 3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결국 내시경 검사는 받지도 못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병원을 찾은 김모(48)씨는 “파업 때문에 대기 시간도 길어 진 것 같다”면서 “아픈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원 로비 한가운데서 시끄러운 노래를 틀고 농성을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기독병원 관계자는 “파업 전보다 대기시간이 조금은 길어 진 것 같다”면서도 “미리 인력 공백을 대비해 비상대기근무를 실시한 덕분에 평상시 수준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수희 보건의료노조 광주기독병원지부장은 “지난 4일 사측과 협상이 결렬된 병원 측의 연락도 없었다”면서 “병원측의 연락이나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독병원과 같은 보건의료노조 소속인 전남대학교 병원과 조선대학교 병원 노조도 같은 이유로 오는 12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며, 오는 14일에는 광주시립요양병원과 호남권역재활병원 노조 등에 파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마지막 모의평가 ‘집중 또 집중’ 5일 광주시 북구 광주제일고에서 고3 학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를 보고 있다. 이번 시험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을 앞두고 실시하는 마지막 모의평가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2009년 용산참사’ 위험 알고도 무리한 진압”

안전조치 없이 투입 6명 사망 경찰청 인권진상조사위 발표

2009년 1월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가 화재 등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무리한 작전을 강행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인권진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용산참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19일 철거민 32명이 재개발 사업 관련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빌딩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하던 중 경찰 강제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숨진 사건이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경찰은 1월19일 철거민들이 망루 농성을 시작하자 조기 진압과 경찰특공대 투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특공대원들은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사전 예행연습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됐다. 특공대 제대장은 작전 연기를 상부에 건의했으나 묵살당했고, 이튿날인 20일 오전 6시30분께 작전이 개시됐다.

특공대가 옥상에 1차 진입하고,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지는 등 저항하는 과정에서 1차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 측 컨테이너가 망루를 충돌해 망루가 무너지자 안에 있던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흘러내려 망루와 옥상에 들어쳤다.

경찰 지휘부는 망루 내부에 인화성 유증

기가 가득 찬 상황에서도 특공대원과 농성자들을 위한 안전조치나 작전 일시중단·변경 없이 특공대를 2차 진입시켰고, 이후 참사로 이어진 2차 화재가 발생했다.

조사위는 “2차 진입 강행은 특공대원과 농성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작전 수행이었다”며 “1차 진입 후 유증기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진 점 등을 파악해 적절히 지휘해야 했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당시 서울청 지휘부의 이같은 조치가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입점 상인들 눈물은 외면한 채… ‘네탓 공방’만 하는 캠코-남구청

캠코 “투자손실액 282억 달러” 남구, 공익감사 청구로 맞대응

광주 남구청사 내 소상공인공인을 대상으로 ‘임대 장사’에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2018년 9월 4일자 6면)을 받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광주남구청이 300여억원에 이르는 청사 개발(리모델링)비용과 부진한 임대사업의 책임 소재를 놓고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이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는 사이 청사에 입점한 상인 대부분은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

5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캠코가 사업비를 조달한 청사위탁개발 전반에 대해 지난달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남구는 캠코가 투자한 청사개발 비용을 임대사업 수익으로 회수하지 못하면 상환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가려달라는 것이 감사청구 취지라고 설명했다.

백운광장 인근에 위치한 남구 신청사는 공유재산 위탁개발을 통해 2013년 4월 개청했다. 공유재산 위탁개발은 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물을 캠코가 투자해 신축 또는 리모델링한 뒤 상가 임대수익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남구는 현 청사인 옛 화니백화점 건물을 2011년 5월 105억원에 사들였고, 300억원에 달하는 리모델링 비용을 부

담한 캠코는 향후 22년간 임대사업 수익으로 투자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청사는 지상 9층에 지하 6층 규모다.

공공청사로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하고 지하 1층~지상 3층에 유통업체 ‘메가 아웃’이, 지상 4층에는 가구백화점이 입점했다.

하지만, 입점 상가 대부분이 운영난에 시달리면서 폐업을 해 현재 상가 공실률은 70%에 이를 정도다.

캠코는 현 상황으로는 임대사업 위수탁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투자금 환수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 6월 남구에 리모델링 비용 상환검토 공문을 보낸 상태다.

캠코가 예상한 투자 손실액은 282억원이다. 임대사업으로 회수 못 하는 이 돈을 남구가 내야 한다는 게 캠코측의 논리다.

반면, 남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당시 계약 조건에 따라 청사 임대사업에 따른 모든 권한과 책임이 캠코에 있다며 공공감사 청구로 대응하고 있다.

또 향후 벌여질 소송에 대비해 법률자문도 마친 상태다. 그 사이 상권 활성화 약속만 믿고 청사에 입점한 상인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갔다.

남구 관계자는 “캠코 역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상인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현재, 집회참가자 근거리 촬영 합헌…다수의견은 위헌

집회장소를 100m 정도 벗어나 불법행진한 집회참가자들을 경찰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근거리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헌법재판관 다수의견이 나왔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경찰의 이같은 촬영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지는 못했다. 다만 다수 재판관의 견이 위헌인 만큼 향후 집회현장에서 경

찰의 촬영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A씨 등이 2014년 8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집회참가자를 촬영한 행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주차장 입구 주차 물의 50대 여성 경찰 조사…“주민에게 미안”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로 고의로 막아 물의를 빚은 50대 여성이 경찰서행.

○5일 인천 연수경찰에 따르면 이날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여·51)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3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아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그는 아파트 관계자가 자신의 승용차 앞 유리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화가 나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고의로 막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주민에게도 미안하다고 진술했다”면서 “조서한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 /연합뉴스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 38평, 사무실 전용
-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
- ✓ 시세 - 1억 1000만원
- ✓ 급매 - 8400만원

- ✓ 53평, 사무실/주거 겸용
- ✓ 20층중 7층, 코너, 전망좋은, 전체 올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
- ✓ 시세 - 1억 5000만원
- ✓ 급매 - 1억 1400만원

문의. 010-6834-7400

비금도 옆에
있는 단독섬

"팻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 3번지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 무인도
- 목포에서 50분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있음
- 교환가능(현금 3억+기타부동산)
- 매매 14억(대출3억 포함)

문의.010-3605-5000